

## 저출산의 국제비교-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손 기 태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부연구위원 (ksohn@kiep.go.kr, Tel: 3460-1220)  
 김 민 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아중동팀 연구원 (mhkim411@kiep.go.kr, Tel: 3460-1154)

1.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안
2. 여성노동시장참여율과 합계출산율의 국제비교
3. 여성노동시장참여율과 합계출산율이 모두 높은 그룹의 특성
4. 미국의 사례
5.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시사점

###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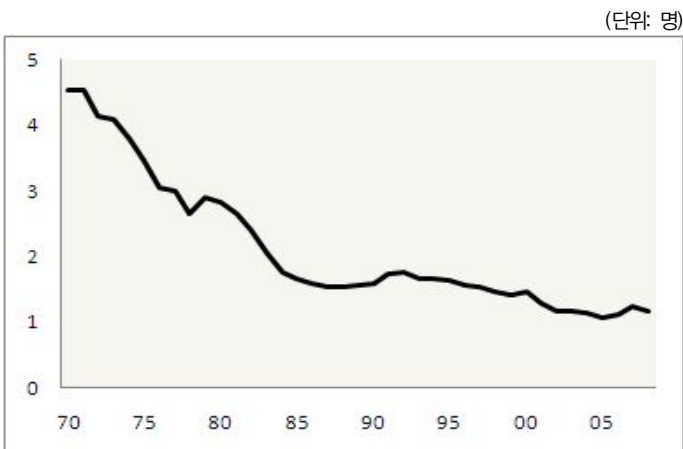
- ▶ 2006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전체 OECD 국가 중 최 하위를 기록하여 저출산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저출산에 따른 경제성장률 저하를 우려하여 정부에서는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출산율이 증가하는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음.
- ▶ 국제비교에 의하면 1980년대 중반 이후 여성노동시장참여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높은 현상이 나타남.
  - 북유럽 국가와 영미 경제권이 대표적인 경우임.
- ▶ 여성의 고용안정수준이 여성노동시장참여율과 출산율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됨.
  - 정부부문 고용비중이 높은 북유럽 국가에서는 정부부문의 여성근로자들이 출산 후에도 직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음.
  - 노동시장이 유연한 영미 경제권의 경우에는 여성의 취업, 출산, 재취업의 과정이 용이함.
- ▶ 국가별 비노동시장의 특성은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단 육아 및 미취업 아동의 교육에 대한 정부지출은 출산율 증가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남.
- ▶ 노동시장이 유연한 미국에는 특별한 출산장려정책이 없지만 2006년 합계출산율은 전체 OECD 국가 중 터키와 멕시코에 이어 3위임.
  - 북유럽 국가에 비해 미국은 높은 출산율을 얻기 위해서 큰 대가를 치르지 않음.
- ▶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구조를 고려할 때,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을 통해서 여성노동시장참여율과 출산율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정책이 바람직할 수 있음.
  - 단,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육아시장 발달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1.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sup>1)</sup>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8년 현재 1.19명에 불과함.

- 1980년대 이전까지 급속히 하락한 후 그 속도는 다소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2006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인 1.65명을 크게 하회하면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함.

그림 1.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추이



자료: OECD; 통계청.

- 저출산이 한 세대 이상 지속될 경우, 노동력 부족, 노령자 부양의 부담, 내수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곧 경제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저출산과 그에 따른 경제성장률 저하를 우려하여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저출산에 따른 경제성장률 저하를 우려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신생아, 영유아, 초중고생에 대해 교육 및 보건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출산율의 상승은 시현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국가간 비교를 통해 출산장려정책 외에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2. 여성노동시장참여율과 합계출산율의 국제비교<sup>2)</sup>

### 가. 여성노동시장참여율과 합계출산율의 관계

■ 과거에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가 육아의 기회비용을 높이기 때문에 출산율을 낮추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음.

■ 그러나 [그림 2]의 국가간 비교에서 볼 수 있듯이, 1980년대 중반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이 높을수록 출산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여성노동시장참여율과 합계출산율의 상관계수가 1990년대 전반기 이후 소폭 하락하였지만 최근까지 여전히 양의 수치임.
- 동 현상은 여성의 직업활동과 출산이 병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

그림 2. 연도별 여성노동시장참여율과 합계출산율의 상관관계



주: [표 1]에 나열된 국가를 대상으로 계산한 상관계수의 시계열임.  
자료: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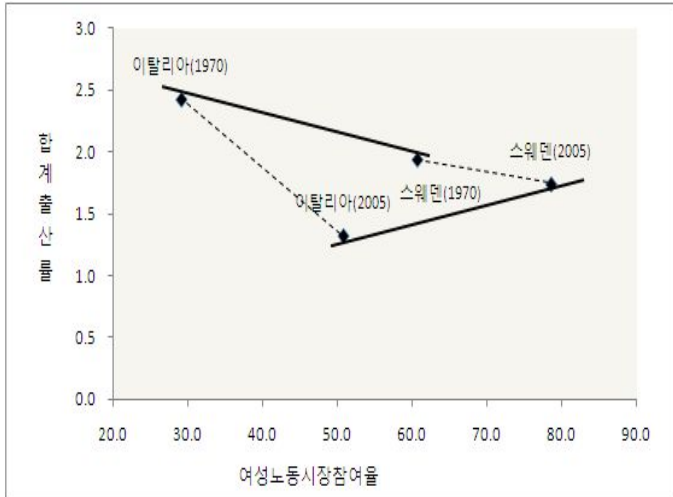
- 국가 내 비교에서는 여성노동시장참여율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이 낮음.
- 예를 들어 1970년과 2005년 사이 이탈리아와 스웨덴에서 여성노동시장참여율이 증가할수록 합계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1)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세에서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한 여성이 현재의 연령별 출산율을 경험하면서 가임기간 동안 생존했을 때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나타냄.

2) 2, 3, 4절의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순상관관계에 의존하여 출산율과 여러 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였지만, 이 내용은 다중회귀분석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

- 그러나 국가간 비교에서는 비록 1970년에 이탈리아와 스웨덴의 여성노동시장참여율과 합계출산율이 음의 관계에 있지만, 2006년에는 이 두 변수가 양의 관계를 시현함.

그림 3. 이탈리아와 스웨덴의 노동시장참여율과 합계출산율의 변화 (단위: %)



자료: OECD.

- 국가간 비교와 국가 내 비교가 상반된 결과를 낳는 이유는 노동시장구조나 출산정책 등에 있어서 국가마다 개별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임.

- 따라서 노동시장구조와 출산정책이 여성노동시장참여율과 합계출산율에 어떠한 차별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나. 여성노동시장참여율과 합계출산율이 모두 높은 그룹

- 1970년과 2006년 중 기간평균 여성노동시장참여율에 따라 주요 OECD 국가는 세 그룹으로 구분될 수 있음.

- 대체로 영미 경제권과 북유럽 국가는 65% 이상의 높은 여성노동시장참여율을 보임.

표 1. 주요 OECD 국가의 여성노동시장참여율

(단위: %)

| 구 분                          | 국가    | 기간평균 여성노동시장참여율<br>(1970~2006년) |
|------------------------------|-------|--------------------------------|
| 낮은 국가<br>(55% 미만)            | 이탈리아  | 41.0                           |
|                              | 스페인   | 42.8                           |
|                              | 아일랜드  | 46.4                           |
|                              | 그리스   | 46.7                           |
|                              | 룩셈부르크 | 47.6                           |
|                              | 네덜란드  | 49.3                           |
|                              | 벨기에   | 51.3                           |
| 중간 국가<br>(55% 이상,<br>65% 미만) | 독일    | 57.0                           |
|                              | 호주    | 57.3                           |
|                              | 프랑스   | 57.6                           |
|                              | 일본    | 59.0                           |
|                              | 포르투갈  | 60.9                           |
|                              | 오스트리아 | 63.4                           |
| 높은 국가<br>(65% 이상)            | 캐나다   | 66.1                           |
|                              | 영국    | 68.1                           |
|                              | 미국    | 68.1                           |
|                              | 노르웨이  | 69.3                           |
|                              | 핀란드   | 70.5                           |
|                              | 스위스   | 73.2                           |
|                              | 스웨덴   | 75.8                           |
|                              | 덴마크   | 76.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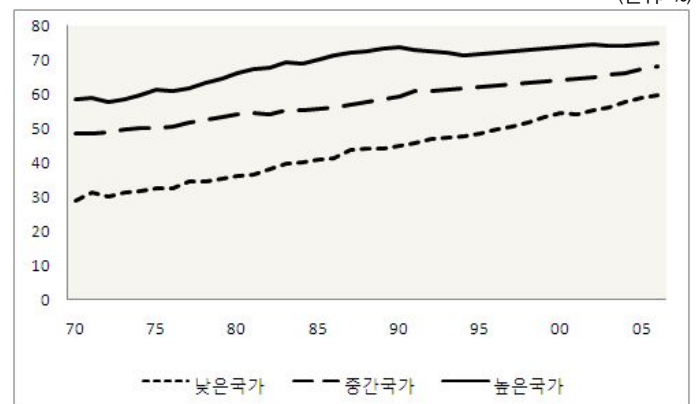
자료: OECD.

- 2006년 기준 여성노동시장참여율이 높은 그룹은 1970~2006년 기간에 평균적으로 높은 여성노동시장참여율을 보였음.

- 기간평균 여성노동시장참여율에 관계없이 1970년 이후 모든 그룹에서 여성노동시장참여율이 증가함.

그림 4. 그룹별 여성노동시장참여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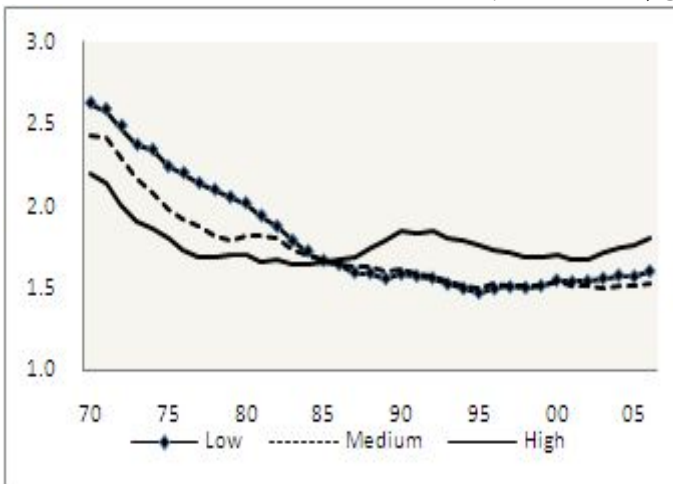
자료: OECD.

■ 2006년 현재 여성노동시장참여율이 높은 그룹이 높은 합계출산율을 보임.

-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여성노동시장참여율이 높은 그룹의 합계출산율이 여타 그룹의 합계출산율을 상회하기 시작하여 2006년 그 수치는 1.8명에 달함.
- 여성노동시장참여율이 가장 낮은 그룹의 합계출산율의 경우 2.6명에서 1.6명으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임.

그림 5. 그룹별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2006년 기준,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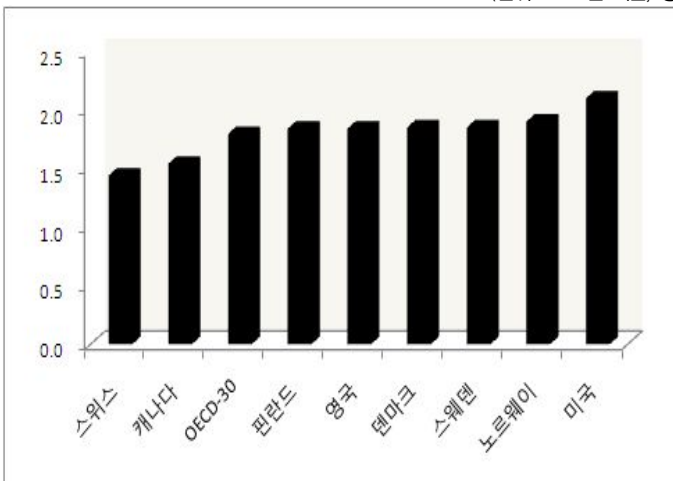
자료: OECD.

■ 여성노동시장참여율이 높은 국가의 합계출산율은 대체로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합계출산율이 2.1명으로 가장 높은 반면, 스위스와 캐나다는 OECD 평균(1.65명)보다 낮은 수치를 보임.

그림 6. 여성노동시장참여율이 높은 그룹의 합계출산율

(단위: 2006년 기준, 명)



자료: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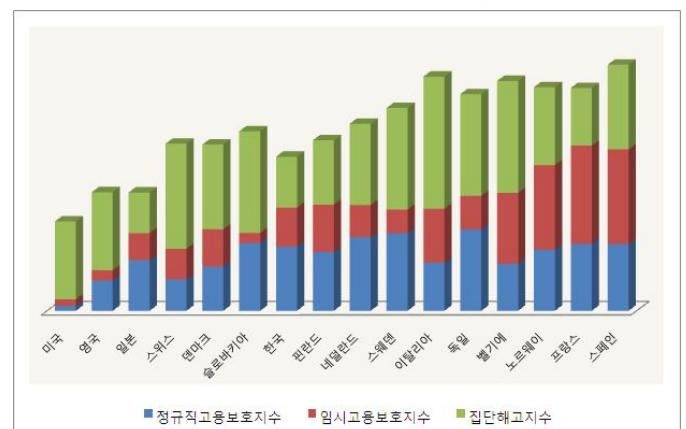
### 3. 여성노동시장참여율과 합계출산율이 모두 높은 그룹의 특성

#### 가. 노동시장 특성

■ 출산율이 높은 그룹의 국가는 대표적으로 노동시장이 자유로운 영국과 미국, 그리고 공공부문의 고용 비중이 큰 북유럽 국가를 들 수 있음.

- 고용보호 수준에서 OECD 국가 중 미국이 가장 낮고 영국이 그 뒤를 이음.
-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의 비중이 큰 국가는 주로 북유럽 국가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이 있음.

그림 7. OECD 국가별 고용보호법제지수(2008년, 버전 2)



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체 고용보호법제지수가 높은 편임.  
자료: OECD.

■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국가는 각각 상이한 방법으로 여성에게 고용안정을 제공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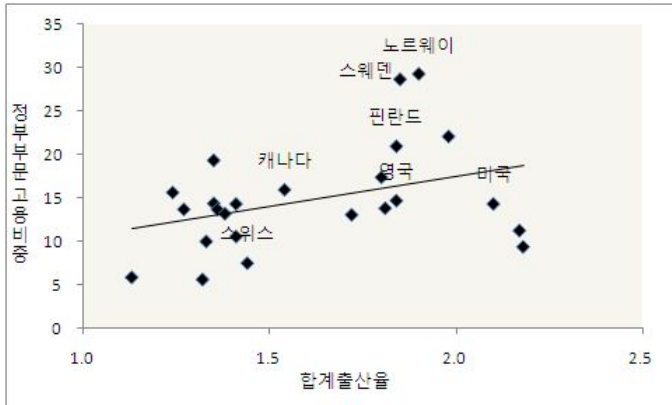
- 노동시장이 유연한 영국과 미국에서 여성은 출산 후에도 쉽게 재취업을 할 수 있음.
- 정부부문의 고용비중이 큰 북유럽에서 공공부문에 취업한 여성은 출산 후 재취업이 보장되어 있음.

■ 정부부문의 고용은 안정적인 고용의 대표적 형태로서 일반적으로 동 수치가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이 높음.

- 다만, 미국의 경우 정부부문의 고용비중은 북유럽 국가보다 낮지만 합계출산율은 높음.

그림 8. 정부부문의 고용비중과 합계출산율의 상관관계

(단위: %, 명)



주: 임신기간을 고려하여, 정부부문의 고용비중은 2005년 기준이고, 합계출산율은 2006년 기준임. 24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계산함. 두 변수 간 상관계수는 0.37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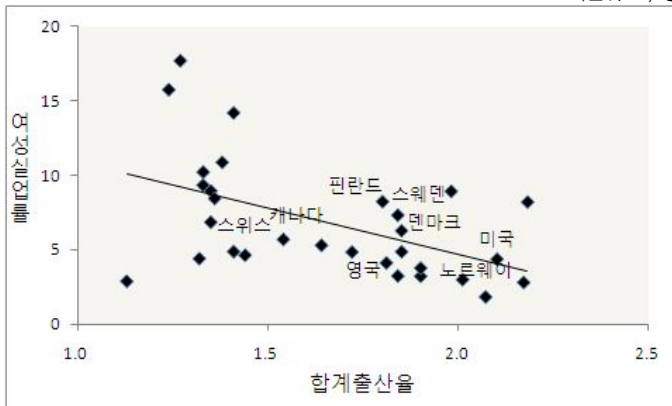
자료: OECD.

■ 여성실업률은 거시경제적 고용불안의 척도로서 동 수치가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이 낮음.

- 여성실업률이 북유럽 국가보다 대체로 낮은 미국의 경우, 합계출산율은 높게 나타남.

그림 9. 여성실업률과 합계출산율의 상관관계

(단위: %, 명)



주: 임신기간을 고려하여, 25~54세의 여성실업률은 2005년 기준이고, 합계출산율은 2006년 기준임. 30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계산함. 두 변수 간 상관계수는 -0.5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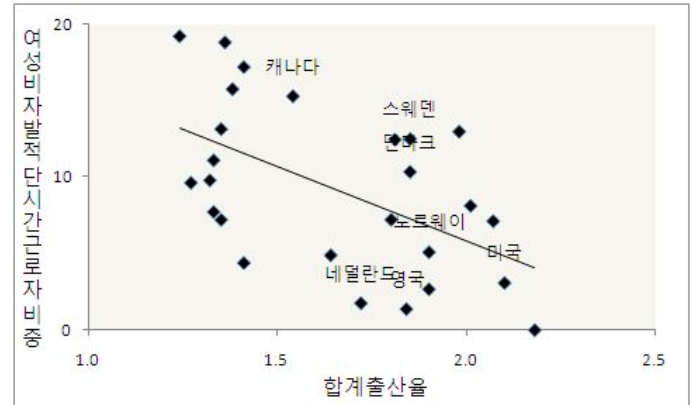
자료: OECD.

■ 한편 노동시장의 구조적 고용불안의 척도 중 하나인 비자발적 여성단시간근로자 비중과 합계출산율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

- 북유럽 국가보다 비자발적 여성단시간근로자 비중이 낮은 미국의 경우 합계출산율은 높음.

그림 10. 비자발적 여성단시간근로자 비중과 합계출산율의 관계

(단위: %, 명)



주: 25~54세 여성의 비자발적 단시간근로자 비중은 해당 연령의 여성단시간근로자 중 비자발적으로 근무하는 여성의 비중을 일컬음. 임신기간을 고려하여, 특정 국가를 제외하고 비자발적 여성단시간근로자 비중은 2005년 기준이고, 합계출산율은 2006년 기준임. 아이슬란드는 2002년, 아일랜드와 터키는 2004년 기준임. 26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계산함. 두 변수 간 상관계수는 -0.54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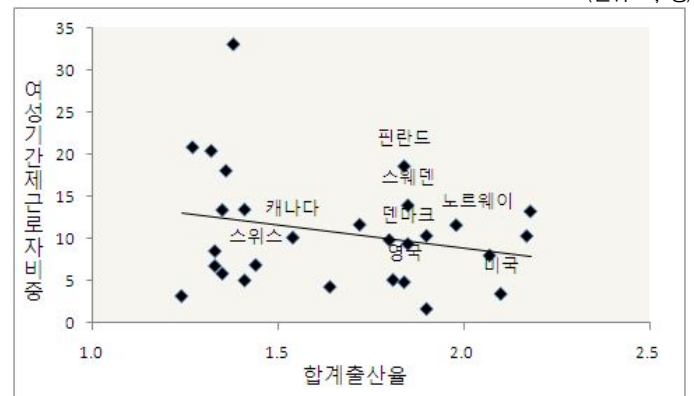
자료: OECD.

■ 비정규직의 대표적인 형태인 기간제근로(temporary employment)의 경우, 그 비중이 증가할수록 합계출산율은 하락함.

- 미국은 북유럽 국가보다 여성기간제근로자의 비율이 낮고 합계출산율은 높음.

그림 11. 여성기간제근로자 비중과 합계출산율의 상관관계

(단위: %, 명)



주: 임신기간을 고려하여, 특정 국가를 제외하고 25~54세의 여성기간제근로자 비중은 2005년 기준이고, 합계출산율은 2006년 기준임. 호주는 2004년, 그리스는 2001년 기준임. 28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계산함. 두 변수 간 상관계수는 -0.24임.

자료: OECD.

## 나. 비노동시장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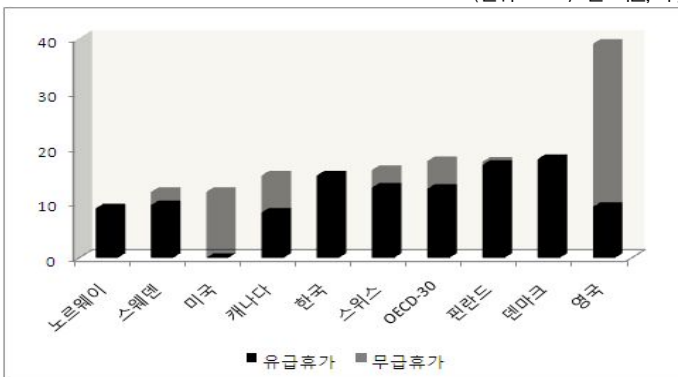
■ 노동시장 특성 외에도 비노동시장의 다양한 특성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비노동시장 특성의 대표적인 예로는 여성출산휴가, 육아비용, 영유아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 등이 있음.

■ 여성출산휴가와 합계출산율 간에는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됨.

- 30개 OECD 국가의 유급휴가기간과 합계출산율은 오히려 음의 상관관계를 가짐(상관계수 -0.45).
- 우리나라의 유급휴가기간은 OECD 평균을 상회하지만 합계출산율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그림 12. 여성노동시장참여율이 높은 그룹의 여성출산휴가기간  
(단위: 2006/7년 기준,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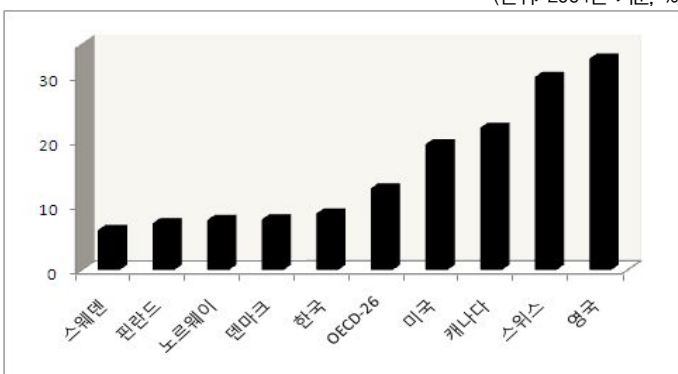
주: 우리나라는 여성노동시장참여율이 높은 그룹에 포함되지 않지만 비교 목적으로 첨가됨.

자료: OECD Family Database.

■ 가계소득 대비 순육아비용의 비중과 합계출산율도 상관관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26개 OECD 국가의 육아비와 합계출산율은 오히려 양의 관계임(상관계수 0.33).

그림 13. 여성노동시장참여율이 높은 그룹의 육아부담  
(단위: 2004년 기준, %)



주: 순육아비용은 육아비용에서 육아혜택, 육아리베이트, 세금공제, 기타 혜택을 제한 비용을 일컫음. 그림에서 사용된 순육아비용은 부모의 소득이 평균임금보다 2/3 높다는 가정하에 구한 수치임. 우리나라는 여성노동시장참여율이 높은 그룹에 포함되지 않지만 비교 목적으로 그림에 포함됨.

자료: OECD Family Database.

-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대체로 영미 경제권은 육아부담이 높고 북유럽은 그 반대임.

- 우리나라의 육아부담은 OECD 평균을 하회하지만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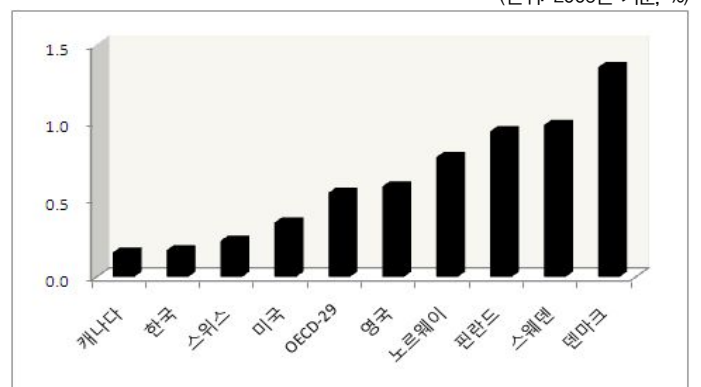
■ 육아 및 미취학 아동의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의 증가는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됨.

- 29개 OECD 국가의 공공지출과 합계출산율은 정의 관계를 보임(상관계수 0.55).

- 미국을 제외할 경우, 출산율이 높은 OECD 국가는 대체로 OECD 평균을 상회하는 GDP 비율의 예산을 육아 및 미취업 아동의 교육에 지출함.

- 우리나라의 공공지출은 OECD 평균을 크게 하회함.

그림 14. 여성노동시장참여율이 높은 그룹의 육아 및 미취업 아동 교육에 대한 GDP 대비 공공지출 비중  
(단위: 2005년 기준, %)



주: 우리나라는 여성노동시장참여율이 높은 그룹에 포함되지 않지만 비교 목적으로 첨가됨.

자료: OECD Family Database.

## 4. 미국의 사례

-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출산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커다란 재정지출 없이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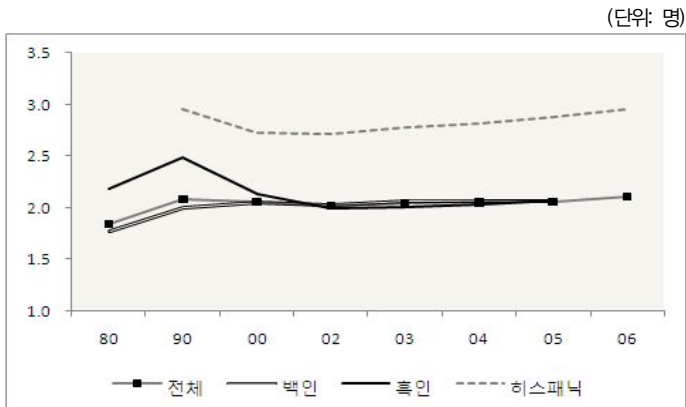
- 미국의 합계출산율은 최근 몇 년간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높은 출산율은 특정 인종에 국한된 현상이 아님.

- 타인종에 비해 히스패닉인종의 합계출산율이 2006년 3.0명으로 높지만 히스패닉인종의 인구비중을 고려할 때 전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sup>3)</sup>

3) The 2009 Statistical Abstract, Table 6, US Census Bureau에 따르면 2007년에 히스패닉인종은 미국 전체 인구의 15.1%를 차지함.

- 이는 미국의 높은 합계출산율이 특정 인종이 갖는 특성의 결과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출생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그림 15. 인종별 합계출산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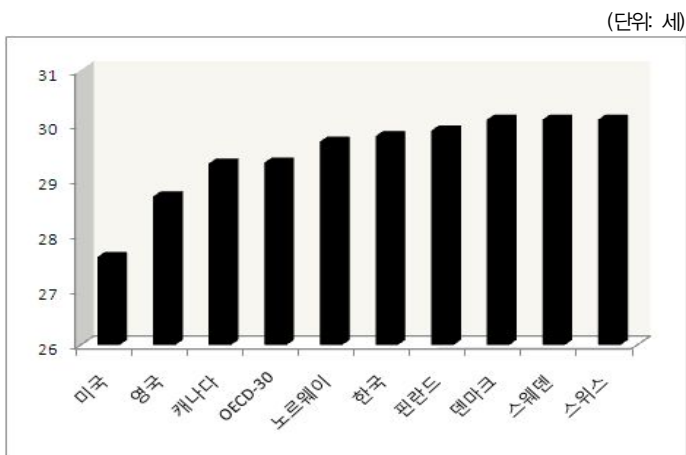
주: 아시아, 태평양 원주민, 아메리카 원주민, 알래스카 원주민 등은 그림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합계' 항목에는 포함됨.

자료: US Census Bureau, *The 2009 Statistical Abstract*, 표 82.

- 여성노동시장참여율이 높은 그룹 중 평균임신연령이 낮을수록 합계출산율이 높는데, 미국의 평균임신연령은 27.6세로 여성노동시장참여율이 높은 그룹에서 가장 낮음.

- 미국의 평균임신연령은 전체 OECD 국가 중 슬로바키아와 멕시코에 이어 3위로 낮음.

그림 16. 여성노동시장참여율이 높은 그룹의 평균임신연령



주: 해당 연령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2002~04년 기준임. 우리나라는 여성노동시장참여율이 높은 그룹에 포함되지 않지만 비교 목적으로 그림에 포함됨.

자료: UN, *World Fertility Patterns 2007*.

- 미국은 특별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2006년의 합계출산율은 전체 OECD 국가 중 터키와 멕시코에 이어 3위임.

- 미국은 출산에 따른 여성유급휴가가 없으며, 가계소득 대비 육아부담은 OECD 평균을 상회하는 반면 육아 및 미취학 아동에 대한 공공지출은 OECD 평균을 하회함.

- 미국의 노동시장은 여성의 자유로운 취업, 휴직, 재취업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의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출산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특혜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업은 여성의 고용을 기피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됨.

- 여성의 재취업이 용이하기 때문에 기업은 이미 고용된 여성에 대해서도 인적자본 투자를 계속하고, 이는 다시 여성의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됨.

- 여성노동시장참여율과 합계출산율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서는 육아시장의 발달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여성노동시장참여율과 출산율이 동시에 증가하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을 전후해서 1세 이하의 영아를 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이 눈에 띄게 증가함.

- 1977~94년 기간 중 아동 수가 135% 증가하였는데, 이 중 양육기관(organized child care)에 맡겨진 아동 수는 430% 증가함.<sup>4)</sup>

표 2. 자녀 연령별 여성노동시장참여율의 추이

(단위: %)

|                    | 1975년 | 1985년 | 1994년                  |
|--------------------|-------|-------|------------------------|
| 1세 이하              | 30.8  | 49.4  | 58.8(91) <sup>1)</sup> |
| 2세                 | 37.1  | 54.0  | 64.5(74)               |
| 3~5세               | 42.2  | 58.4  | 64.6(53)               |
| 6~13세              | 51.8  | 68.2  | 75.5(46)               |
| 14~17세             | 53.5  | 67.0  | 77.2(44)               |
| 자녀없음 <sup>2)</sup> | 43.8  | 48.2  | 53.2(21.5)             |
| 전체                 | 44.4  | 54.2  | 60.6(36)               |

주: 남편이 있는 여성이 통계 대상임.

1) ( ) 안의 숫자는 1975~94년 동안 여성노동시장참여율의 증가율을 나타냄.

2) 18세 이하의 자녀가 없다는 의미임.

자료: V. J. Hotz, J. A. Klerman, and R. A. Miller(1997), "The economics of fertility in developed countries," in M. R. Rosenzweig, and O. Stark eds., *Handbook of Population and Family Economics*, pp. 275~347.

- 여성의 임금이 상승하면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했으며, 동시에 여성의 임금에 비해 육아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출산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4) D. F. Martinez and A. Iza(2004), "Skill premium effects on fertility and female labor force supply,"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7, pp. 1-16.

## 5.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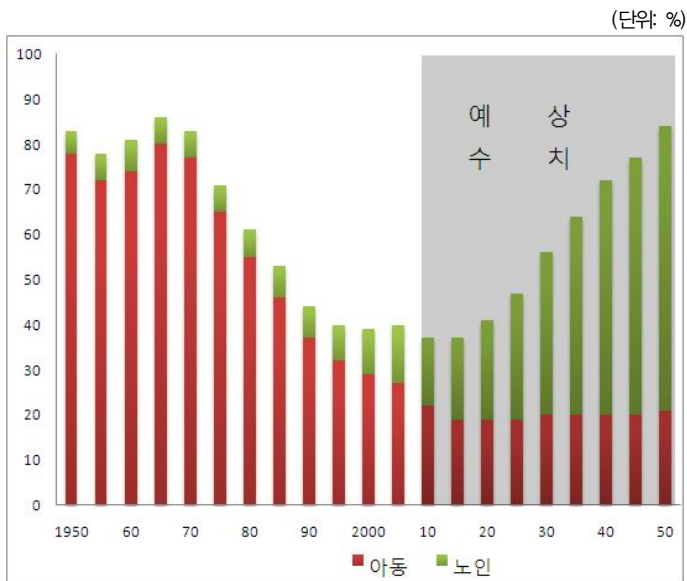
■ 노동시장 변수와 합계출산율 간에 상관관계가 아닌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는 단언할 수 없지만, 여러 변수가 일관된 방향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출산 관련 정책 마련 시 노동시장 변수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노동시장변수가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합계출산율이 노동시장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 노동시장변수와 합계출산율 간에 특별한 관계가 없더라도 제3의 변수가 노동시장변수와 합계출산율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우리나라는 2015년 이후 노령자 피부양률이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성노동시장참여율과 출산율이 동시에 증가할 경우 근로자 일인당 노령자 부양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국가간 비교를 살펴보면, 여성노동시장참여율과 출산율이 동시에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
- 예를 들어, 영미 경제권과 북유럽 국가가 여성노동시장참여율과 출산율이 동시에 상승하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음.

그림 17. 아동 및 노령자 피부양률



자료: World Population Prospects, UN.

■ 여성노동시장참여율과 출산율이 높은 그룹은 여성고용이 안정되어 있는 특징을 보임.

- 영미 경제권, 특히 미국의 경우 노동시장이 유연하여 여성이 출산 및 육아 후에도 쉽게 재취업을 할 수 있음.

- 북유럽 국가의 경우 정부부문의 고용비중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고용안정이 증진됨.

■ 노동시장정책을 통해서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정책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됨.

- 여성에 대한 출산혜택 또는 육아부담이 특별히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는 약하지만, 육아 및 미취학 아동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는 고려할 여지가 있음.
- 노동시장정책을 통해서 출산율을 증가시킬 경우 육아시장의 발달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우리나라는 북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정부부문 고용비중이 대단히 작고 영미 경제권에 비해서는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경직적임.

- 2005년 우리나라의 정부부문 고용비중은 24개 OECD 국가 중 23위임.
- 정규직과 임시직의 경우, 2008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30개 OECD 국가 중 15위를 차지함.

■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구조를 고려할 때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을 통해서 여성노동시장참여율과 출산율을 동시에 증가시키는 정책을 시도할 수 있음.

- 비정규직 고용 및 해고의 요건은 엄격히 하는 반면 정규직의 고용과 해고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이분화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모색할 수 있음.

-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과도기 중에는 출산장려정책에 소요되는 지출을 실업 관련 보조금으로 전환하여 여성저임금 실업자의 소득안정을 증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음.

- 제도적으로 여성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출산혜택을 줄 경우, 여성의 고용 및 고용된 여성의 인적자본 증가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곧 출산율 저하로 연결될 수 있음.

- 정부부문의 고용증대를 통해 여성노동시장참여율과 출산율을 높일 수도 있음.
- 그러나 이는 정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음.
- 또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및 연금 등의 장기재정지출을 고려할 때 정부부문의 비대화는 장기적으로 정부재정을 압박할 수도 있음. KIEP